





#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최 오 호\*

## 〈요 약〉

대한민국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국회 청사내 집회 및 시위와 금지물품 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열린국회를 지향함으로써 많은 출입문 개방과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출입통제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를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높지만 보안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선인 외곽에서부터의 적절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곽에서 적절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2023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2020년 6월에 철수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외곽 경비 대체 방안과 더불어 외곽 경호·경호경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사무처 보안 분야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 외곽에서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3선 경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으로는 청원경찰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장기적으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제어** : 대한민국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청원경찰, 3선 경호체계, 출입통제

\*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 I. 서 론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슬람국가(IS)의 국내 소재 미군 시설 공격 지시 등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 테러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장선진 외, 2017). 특히,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동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행위 및 위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열린 국회’ 지향으로 인해 2010년과 2017년 국회를 둘러싼 담장을 허물기 위한 검토<sup>1)</sup>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북한에 의한 테러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회 방문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를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높지만 보안관리에 대한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최오호 외, 2017). 해외의 경우도 2017년 3월 영국 런던 의회 차량 테러, 2014년 10월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국립전쟁기념관, 쇼핑몰 등 동시다발 총격 사건, 2012년 2월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자살폭탄 테러 감행 등 의회를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119> (검색일자: 2019. 6. 28).

대한민국 국회는 주변의 넓은 도로와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한강 고수부지, 외곽에 인접한 지하철역 등 평소 많은 사람과 차량들의 이동으로 인해 보안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와 국회 개방으로 인해 외곽에서의 특별한 통제 없이 국회 내부로의 진입이 가능하여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국회는 사용자 편의 위주의 구조를 하고 있어 외곽에서 국회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차량 및 인원 출입구가 너무 많아 직접적인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 입구를 기준으로 직원 및 방문자에 대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익단체 관계자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질서문란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전용태 외, 2013).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곽에서부터의 적절한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2023년 의무경찰 등 대체 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제도 폐지<sup>2)</sup>에 따라 2020년 6월에 철수하여 국회에 방호책임을 이관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144조에 따라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가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 3선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국회경비대의 외곽 경비업무를 대체할 방안과 더불어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을 강화할 수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사무처의 보안 분야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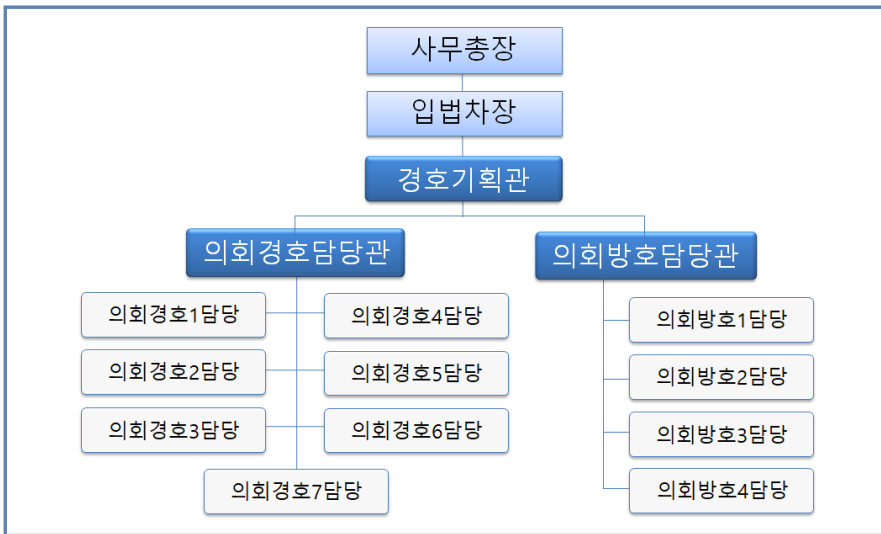
## II. 이론적 배경

### 1. 국회 경호·경비 조직의 편제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1항에서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는 규정과 2012년 5월 30일 시행된 「국회사무처직제시행규칙」(「국

2) 동아닷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7/96204881/1> (검색일자: 2019. 7. 8).

회사무처내규」 제622호) 제6조의2(경호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에 근거하여 사무총장(입법차장) 아래 경호기획관을 두고, 다시 경호기획관 아래 의회경호담당관과 의회방호담당관을 두고 있다(박창희, 2015).



자료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2018) 내부자료 재정리.

〈그림 1〉 국회 경호·경비 조직 편제

## 2. 국회 경호·경비 조직의 운영

「국회사무처직제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서는 의회경호담당관에게 국회 경호·방호업무의 기획 총괄, 본회의 및 위원회의 경호, 국회의사당 참관의 집행에 관한 사항, 국회방청에 관한 사항, 국회청사 출입증 발급·관리업무, 국회경호업무 교육훈련, 테러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맡기고 있다(오병일, 2013). 그리고 동조 제4항은 의회방호담당관에게 방호업무의 계획 수립, 국회청사 시설의 방호 및 경비, 국회청사 출입안내 및 관리,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 방호종합상황실의 운영, 방문증 교부 및 방문인 안내, 국회의사당 경내 주차관리(둔치주차장 포함), 주차카드 발급·관리,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운용업무, 국회운동장 등 옥외공간의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이강봉, 2014).

〈표 1〉 국회 경호·경비 조직 운영개요

의회경호담당관실 - 경위(71명) -	의회방호담당관실 - 방호·안내(128명) - 공무직근로자(48명) [경비 35/ 주차 13]	국회경비대 - 경찰(30명) - 의경(16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경호·방호업무의 기획 총괄</li> <li>• 국회 회의질서유지 및 경호</li> <li>• 국회의장단 예방시 의전경호</li> <li>• 국회 주요행사 질서유지 및 의전경호</li> <li>• 국회 경호상황 정보 수집 및 도청예방</li> <li>• 국회참관집행에 관한 사항</li> <li>• 테러 예방 및 대응</li> <li>• 국회청사 출입증 발급·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청사 시설의 방호 및 경비</li> <li>• 국회청사 출입안내 및 관리</li> <li>•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li> <li>• 방호종합상황실의 운영</li> <li>• 방문증 교부 및 방문인 안내</li> <li>• 국회의사당 경내 주차관리</li> <li>• 주차카드 발급, 관리</li> <li>•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운용</li> <li>• 국회운동장 등 옥외공간의 사용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청사 등 외곽경비계획 수립</li> <li>•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검문</li> <li>• 불순분자 사전색출, 잠입방지 및 검거</li> <li>• 국회의장 공관경비 및 출입자 통제</li> <li>• 국회의장 수행경호</li> <li>• 의무경찰순경 관리</li> <li>•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질서유지</li> </ul>

자료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2019) 내부자료 재정리.

공무직 경비근로자(舊 특수경비)는 총 35명이며, 2015년 3월 의원회관 전자출입시스템 구축 및 본관 출입구(5개소) X-ray 수화물검색기 도입으로 보안인력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직제개정을 통한 대규모 인력증원이 어려워 특수경비용역을 도입하였다.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서운STS에서 특수경비원 총 39명을 위탁관리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광명실업에서 특수경비원 총 35명을 위탁관리 하였다.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수경비원 35명 중 28명을 전환하였다. 이후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사무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신분으로 전원 직접 고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18년 1월 15일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6명, 기간제 1명을 고용하였다(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2019).

〈표 2〉 공무직 경비근로자 근무 현황

구분	경비근로자 35명(남18 / 여17)		
근무지	본관 X-ray 운영	1개소	4명
	의원회관 차량출입통제	3개소	10명
	도서관 출입보안(반장 1)	3개소	11명
	의정·현정기념관 출입보안	3개소	10명
계	10개소	35명	

자료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2019) 내부자료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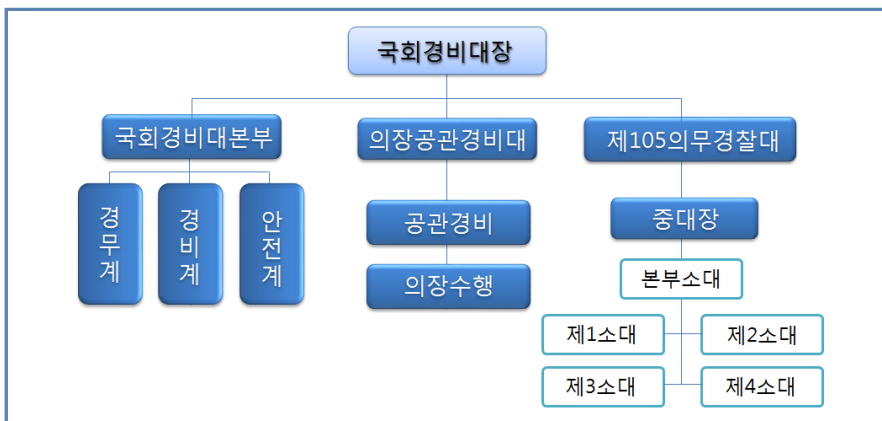
### 3. 국회경비대

#### 1) 연혁 및 역사

국회경비대는 1951년 3월 22일 내무부 훈령 제11107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국회의사당이 중앙청 내에 있을 때에는 행정부와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로 국회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었으나 제2대 국회에서 6.25전쟁으로 인하여 국회가 임시수도인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국회의 경비를 위하여 경찰관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상주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경비대가 운영되고 있다(국회사무처, 2016). 1998년 3월 27일 제105전투경찰대가 국회경비대로 배속이 되었으며, 전투경찰순경 폐지에 따라 2010년 3월에 전경에서 의경으로 전원 교체되었다. 이에 따라 부대의 명칭도 제105전투경찰대에서 제105의무경찰대로 변경되었다(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2018).

#### 2) 경비대 편제 및 업무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와 국회울타리에서 회의장 건물 밖에 이르기까지 국회구역의 경비와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검문, 불순분자 사전 색출 등의 업무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두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대인 국회경비대는 190여명의 경찰관 및 의경으로 조직되어 있다(김태연, 2013).



자료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2018) 내부자료 재정리.

〈그림 2〉 국회경비대 조직도



국회경비대는 하나의 의경 중대를 4개의 소대(40여명)로 편제하여 경비업무에 투입되어 교대근무를 하는 3개 소대, 5분대기대 및 예비대의 임무를 수행하는 1개 소대로 구성되어 있다(오병일 외, 2012). 국회경비대는 집단 민원시위 및 시설점거농성을 사전 차단하는 업무, 5분 대기대의 신속 출동태세 유지, 비상시 신속한 상황전파체제 구축,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입수 시 의회경호담당관 및 의회방호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한 출입문 봉쇄 등 신속한 상황대처 능력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강봉, 2014). 국회경비대 소속 의장공관대는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근접경호는 6명 정도의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다.

〈표 3〉 국회경비대 업무분장

조직구성	주요업무
국회경비대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무, 인사 등, 작전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li> <li>국회청사 등 외곽경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불순분자 잠입방지 및 검거 등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li> <li>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검문에 관한 사항</li> </ul>
의장공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의장 공관경비 및 출입자 통제</li> <li>국회의장 경호</li> </ul>
제105의무경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곽경비 불순분자 사전 색출 관리</li> <li>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질서유지</li> <li>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및 검문</li> <li>의무경찰순경 관리</li> </ul>

자료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2018) 내부자료 재정리.

또한, 국회경비대의 주요 임무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 중요시설 및 의장공관 경비, 국회의장 및 방문요인 경호경비, 집단민원 시위 및 시설 점거농성 차단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업무관할구역은 기본적으로 국회 울타리 내이다. 영등포경찰서의 경우에는 국회울타리 밖을 책임지며, 국회경비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한다. 국회 사무처의 경우에는 건물 내의 상황을 책임지며, 필요시 국회경비대 등을 회의장 건물 밖까지 요청할 수 있다(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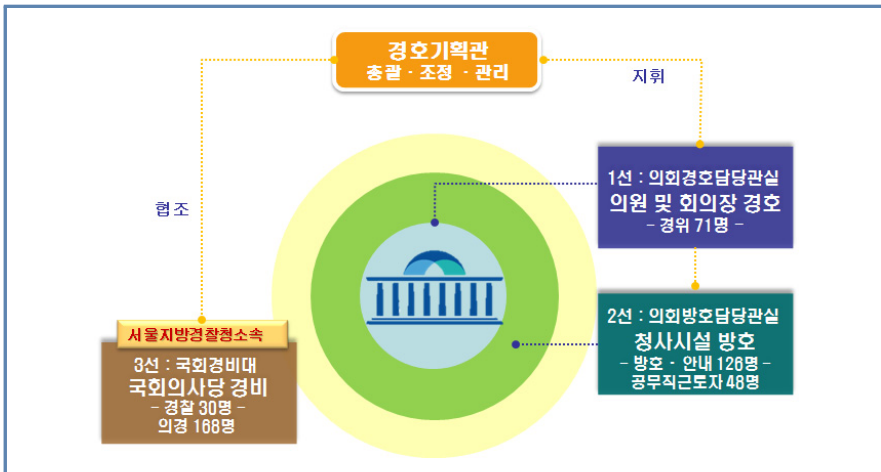
〈표 4〉 임무관할구역

국회경비대	영등포경찰서	국회사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타리(담장)기준, 울타리 내 상황총괄</li> <li>• 국회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검문검색</li> <li>• 불순분자의 잠입방자검거</li> <li>• 울타리내(건물제외) 상황 초동 조치</li> <li>• 국회건물내 상황시 국회사무처 협의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울타리(담장)기준, 울타리 밖 상황책임</li> <li>• 국회주변 집회시위 관리</li> <li>• 국회 밖에서 이동하는 집단 민원인 및 항의방문차단</li> <li>• 국회내 상황발생시 지원 체제 유지</li> <li>• 국회경비대 정보상황 제공</li> <li>• 불법행위 검거자 인수,사법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내 점거농성 시위시 국회사무처 처리원칙</li> <li>• 건물내 각종 상황발생시 국회사무처 협의처리</li> <li>• 국회경내 상황발생시 국회의장 지원요청 시 경력지원</li> <li>• 경비대청사 등 시설관리</li> </ul>

자료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2018) 내부자료 재정리.

### 3) 국회 경호·경비 관계 업무구분도

국회경비는 3선의 경호·경비 체제를 구축하여 제1선은 경위가 건물 내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제2선은 방호원이 경내 주요건물의 경비 및 방호업무를 담당하며, 제3선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을 담당하여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김태연, 2013).



자료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2019) 내부자료 재정리.

〈그림 3〉 국회의 3선 방호 체계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8년 7월 9일부터 2018년 7월 11일까지 국회 보안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국회 외곽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한 인원은 총 11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성별	남자	106(93.0)
	여자	8(7.0)
연령	20대	3(2.6)
	30대	35(30.7)
	40대	43(37.7)
	50대 이상	33(28.9)
학력	고졸	12(10.5)
	전문대졸	14(12.3)
	대졸	80(70.2)
	대학원(석사이상)졸	8(7.0)
직렬	경위	48(42.1)
	방호	60(52.6)
	행정	2(1.8)
	기타(민간경비원 등)	4(3.5)
직급	9급	14(12.3)
	8급	27(23.7)
	7급	28(24.6)
	6급	35(30.7)
	5급	7(6.1)
	4급 이상	3(2.6)
근무년수	5년 미만	16(14.0)
	5년-10년 미만	26(22.8)
	10년-20년 미만	32(28.1)
	20년-30년 미만	33(28.9)
	30년 이상	7(6.1)
	합계	114(100.0)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크게 인구사회학적특성 6문항과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응답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렬, 직급, 근무년수로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 국회 외곽경호 위협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국회 3선 경호 체계에 대한 의견,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 국회경비대 대체 적정 인력에 대한 의견, 3선 경호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 2선과 3선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 침입탐지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 영상감시시스템에 대한 의견,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대한 의견, 의회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 의회경찰 도입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의견, 경호기획관실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등을 통해 파악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보안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검토를 받아 지적 사항을 수정 및 반영하였다. 이후 국회 경호업무 종사자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의 목적 및 문항에 대해 설명한 뒤 질문 내용에 응답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및 데이터 클리닝과정을 거친 후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문항별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국회의 외곽경호가 외부 침입 등의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이다’가 52명(4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높은 수준이다’ 40명(35.1%), ‘보통수준이다’ 15명(13.2%), ‘낮은 수준이다’ 6명(5.3%), ‘매우 낮은 수준이다’ 1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국회 외곽경호가 외부 침입 등의 위협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국회 외곽경호 위협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52	45.6
2	높은 수준이다	40	35.1
3	보통 수준이다	15	13.2
4	낮은 수준이다	6	5.3
5	매우 낮은 수준이다	1	0.9
	합계	114	100

현재 국회의 3선 경호체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가 37명(32.5%)으로 가장 높았으며, ‘효율적이다’ 34명(29.8%), ‘비효율적이다’ 23명(20.2%), ‘매우 효율적이다’ 11명(9.6%), ‘매우 비효율적이다’ 9명(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국회 3선 경호체계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효율적이다	11	9.6
2	효율적이다	34	29.8
3	보통이다	37	32.5
4	비 효율적이다	23	20.2
5	매우 비효율적이다	9	7.9
	합계	114	100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가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청원경찰이 49명(43.0%)으로 가

장 높았으며, ‘의회경찰’ 25명(21.9%), ‘민간경비원’ 16명(14.0%), ‘특별사법경찰관’ 14명(12.3%), ‘기타’ 10명(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청원경찰	49	43.0
2	민간경비원	16	14.0
3	특별사법경찰관	14	12.3
4	의회경찰	25	21.9
5	기타	10	8.8
	합계	114	100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가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우 적정 인력에 대해 설문한 결과, ‘200명’이 49명(43.0%)으로 가장 높았으며, ‘300명’ 40명(35.1%), ‘500명’ 9명(7.9%), ‘400명’, ‘기타’ 각 6명(5.3%), ‘100명’ 4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현재 약 19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경비대(공관경비대 포함)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국회경비대 대체 적정 인력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100명	4	3.5
2	200명	49	43.0
3	300명	40	35.1
4	400명	6	5.3
5	500명	9	7.9
6	기타	6	5.3
	합계	114	100

현재 지휘·명령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3선 경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동의한다’가 35명(30.7%)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동의한

다' 31명(27.2%), '보통이다' 22명(19.3%),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각 13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3선 경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3선 경호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동의한다	31	27.2
2	동의한다	35	30.7
3	보통이다	22	19.3
4	동의하지 않는다	13	11.4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3	11.4
	합계	114	100

현재 3선의 경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2선과 3선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가 26명(22.8%)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의하지 않는다' 25명(21.9%), '동의한다' 24명(21.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3명(20.2%), '매우 동의한다' 16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2선과 3선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동의한다	16	14.0
2	동의한다	24	21.1
3	보통이다	26	22.8
4	동의하지 않는다	25	21.9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3	20.2
	합계	114	100

현재 국회는 외곽 경호를 위한 특별한 침입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침입 감지기와 같은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60명(52.6%)으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다' 37명(32.5%), '보통이다' 9명(7.9%), '필요하지 않다' 6명(5.3%), '전혀 필요하지 않다'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침입탐지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필요하다	60	52.6
2	필요하다	37	32.5
3	보통이다	9	7.9
4	필요하지 않다	6	5.3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1.8
	합계	114	100

현재 외곽 경호를 위한 CCTV 등 영상감시시스템이 어떤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효율적이다’가 49명(43.0%)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효율적이다’ 39명(34.2%), ‘보통이다’ 19명(16.7%), ‘비효율적이다’ 5명(4.4%), ‘매우 비효율적이다’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영상감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영상감시시스템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효율적이다	39	34.2
2	효율적이다	49	43.0
3	보통이다	19	16.7
4	비효율적이다	5	4.4
5	매우비효율적이다	2	1.8
	합계	114	100

외곽 경호를 위하여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동의한다’가 47명(41.2%)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가 29명(25.4%), ‘매우 동의한다’가 27명(23.7%), ‘동의하지 않는다’ 6명(5.3%), ‘매우동의하지 않는다’ 5명(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외곽 경호를 위하여 드론 등 4차 산



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동의한다	27	23.7
2	동의한다	47	41.2
3	보통이다	29	25.4
4	동의하지 않는다	6	5.3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	4.4
	합계	114	100

국회 경호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동의한다’가 43명(37.7%)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동의한다’ 27명(23.7%), ‘보통이다’ 25명(21.9%), ‘동의하지 않는다’ 11명(9.6%), ‘매우동의하지 않는다’ 8명(7.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국회 경호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의회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동의한다	27	23.7
2	동의한다	43	37.7
3	보통이다	25	21.9
4	동의하지 않는다	11	9.6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8	7.0
	합계	114	100

국회 경호를 위해 의회경찰을 도입할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동의한다’가 52명(4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동의한다’ 29명(25.4%), ‘보통이다’ 19명(16.7%), ‘동의하지 않는다’ 9명(7.9%),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명(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의회경찰 도입 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의회경찰 도입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동의한다	29	25.4
2	동의한다	52	45.6
3	보통이다	19	16.7
4	동의하지 않는다	9	7.9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	4.4
	합계	114	100

효과적인 경호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사, 예산, 교육 종합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경호기획관실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매우 동의한다’가 47명(41.2%)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의한다’ 27명(23.7%), ‘보통이다’ 19명(16.7%), ‘동의하지 않는다’ 13명(11.4%),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8명(7.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경호기획관실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경호기획관실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동의한다	47	41.2
2	동의한다	27	23.7
3	보통이다	19	16.7
4	동의하지 않는다	13	11.4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8	7.0
	합계	114	100

## V. 결 론

국방개혁 및 병역자원 감소 등으로 인한 의무경찰 폐지로 인해 기존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을 담당하던 국회경비대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외곽 경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 경호·경비 조직의 운영, 국회경비대 업무 등을 검토하였고,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회 보안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국회 외곽에서 외부 침입 등의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80.7%가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테러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국회청사 내의 집회 및 시위와 청사 내 금지물품의 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열린 국회를 지향함으로써 많은 출입문 개방과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출입통제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는 외곽 경호·경비를 위한 특별한 침입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침입감지기와 같은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85.1%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CCTV 등 영상감시시스템에 대해 77.2%가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회 외곽 경호·경비를 위하여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64.9%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국회 외곽의 각종 위협과 취약점을 제거하여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3선 경호체계의 효율성 및 2선과 3선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났으며, 지휘·명령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3선 경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7.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호기획관실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64.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국회 경호·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사, 예산, 교육 종합계획수립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가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청원경찰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이를 대체할 적정 인력으로는 200명이 43.0%, 300명이 35.1%로 나타나 현재 약 19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경비대(공관경비대 포함)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체 가능인력 중 청원경찰은 직무 범위 내에서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총 등 무기휴대권한과 장비사용권한을 갖고 있어 타 대체인력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정기조와 국가공무원 총 정원제도 등을 고려한다면 청원경찰이 가장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중장기적으로 국회 경호를 위해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61.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경호를 위해 의회경찰을 도입할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71.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국회경비대를 대체할 외곽 경호의 단기적인 방안은 청원경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로 대체될 경우 3선에 대한 경호를 경호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경호기획관 조직의 개편도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의 보좌기관에서 보조기관으로 변경하여, 경호기획관을 경호국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호국에는 경호심의관을 신설하고, 경호국 아래에 경호총괄과, 경호과, 방호과, 경비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3)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855> (검색일자: 2019. 7.11).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국회사무처 (2016). 국회선례집. 서울: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2018). 내부자료. 서울: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2019). 내부자료. 서울: 국회사무처.
- 김태연 (2013). 대한민국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경호공무원의 인식 및 함의.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창희 (2015).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오병일 (2013). 대한민국국회 조직특성에 따른 경호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병일, 이주락, 김태연 (2012). 국회 경호·경비 체제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9(1), 187-205.
- 이강봉 (2014).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과 작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성진, 김영현, 신승철 (2017). 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2, 73-91.
- 전용태, 이주락, 김태연 (2013). 국회 시설물의 경호·경비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2(2), 237-260.
- 최오호, 이주락, 오병일 (2017). 국회청사 테러 인식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12(2), 277-297.

### 2. 기타

- 경기신문, 이학재·우원식, ‘국회담장 허물기 토론회’ 공동 개최.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119>, 검색일 2019. 6. 28.
- 동아닷컴, 거세지는 폭력시위, 위태로운 경찰경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7/96204881/1>, 검색일 2019. 7. 8.
- 보안뉴스, 의경 없어진다는데... 국가중요시설 보안·안전 누가 책임지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855>, 검색일 2019. 7. 11.

## 【Abstract】

## Improving the Protection and Security System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Choi, O-Ho

Despite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increasingly vulnerable to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nd the instances of demonstrations occurring around and banned items taken into the building are continuing to rise. In addition, promoting the idea of “open assembly” has led to increased visitors and weakened access control. Furthermore, while there is a significant symbolic value attached to attacking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e level of security management is relatively very low, making it a suitable target for terrorism. In order to address such vulnerability, an appropriate access control system should be in place from the areas surrounding the building.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Security Service which oversees security around the building is scheduled to disband in June 2020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conscripted police force in 2023.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n alternative option to bolster the security system outside the facility. In this research, the perceptions of 114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security at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toward the protection and security system of the areas surrounding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were examined. Results showed that the respondents believed it was highly likely that risky situations could occur outside the building, and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intrusion detection system, and drones was viewed favorably. Moreover, a mid- to long-term plan of establishing a unified three-layer protection system and designating a department in charge of the security outside the building were perceived positively. Lastly, the participants supported the idea of employing private police to replace the National Assembly Security Service for the short term and introducing parliamentary police for the mid- to long-term.

**Keywords:**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utside protection

and security system, Private police, Three-layer security system,  
Access control